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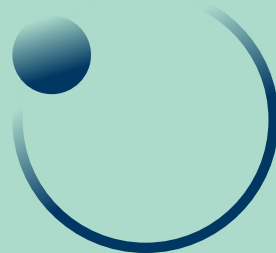


대한민국 국회



2023. 2. 2.(목)
14:30~16:4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홍 문 표

주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

□ (배 경)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농어업인 삶의질위원회’ 통합 결정으로 농특위 기능 확대 예정

* 정부 위원회 정비방안(22.7월)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질위원회’ 폐지 및 농특위로 기능 이관을 위한 법률개정안 정부발의(22.9.30)

●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 등 논의 필요

* 한시조직인 농특위(5년, ~’24.4월)가 상설조직인 농어업인 삶의질위원회(’04~)를 통합함에 따라 ‘삶의질향상 5개년 계획 수립’ 등 삶의질 업무의 안정성 저하 우려

□ (목적) 농특위 기능 강화, 농어업·농어촌 현안과 중장기 과제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농특위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모색

□ (일시/장소) 2023. 2. 2.(목) 14:30~16:4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주관) 홍문표 국회의원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주요 내용

● (주제발표) ‘새시대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과제’

–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좌장 겸임)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강 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

– 전병설 한국4-H본부 회장대행

– 류정곤 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장

–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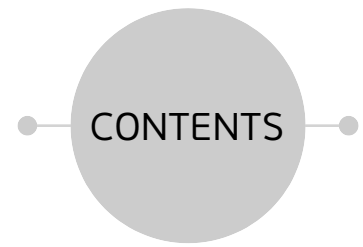
– 김상경 농특위 사무부국장

□ 세부 일정(안)

- 일 시: '23. 2. 2.(목) 14:30~16:4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주관: 홍문표 국회의원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해수부

일 정		주 요 내 용	비고
14:30~15:00	(30')	○ 개회식 - 개회사 * 홍문표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환영사 *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 축사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 기념촬영	
15:00~15:20	(20')	○ 발제 - “새시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과제” *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20~16:20	(60')	○ 지정토론 (좌장 겸임: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강 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 - 전병설 한국4-H본부 회장대행 - 류정곤 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장 -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국장 - 김상경 농특위 사무부국장	
16:20~16:40	(20')	○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윤화현 한국양봉협회 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정영훈 한국수산물 회장, 한국행정학회 박정호 상명대 교수, 손남태 농협중앙회 국장, 조용준 수협중앙회 실장 등	
16:20~		○ 정리 및 폐회	

※ 회의 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개회사

홍문표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6
---------------------------	----

환영사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08
------------------------	----

축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0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12

주제발표

“새시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과제”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

지정토론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37
전병설 한국4-H본부 회장대행	43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49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53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57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61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국장	65
김상경 농특위 사무부국장	71

| 개회사 |

홍문표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예산·홍성 국회의원 홍문표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주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현대화를 겪으며 농어업보다는 기술산업으로 농어촌보다는 도시로 사회의 관심이 움직였고, 자연스레 농어촌은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떨어져 갔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농어촌의 인구는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농간 정주 환경의 격차 역시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농어촌 지역의 지방소멸론을 끊임없이 제기시켰고, 농어촌 인구의 저밀도 분산 거주로 인한 서비스와 접근성 심화를 유발하여 우리는 농어촌 삶의 질 저하의 위기를 마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가 불러온 식량난은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를 글로벌 핵심 과제로 이끌었고 식량자급률은 21세기의 초기술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농어촌의 사람과 공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농어촌에는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지만 가난은 구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량 문제로 인한 가난과 고난의 걱정을 후손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농촌의 사람들을 돌보고 공간을 가꾸어야 합니다.

식량 위기 속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은 원론적으로 우리 농어촌의 발전과 필수 불가결한 관계이기에 우리는 농어촌의 인프라에 주목하고 농어촌 인구 문제를 고민하며,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에 향후 통합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새로운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새로운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고대하며, 저 역시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여 국회에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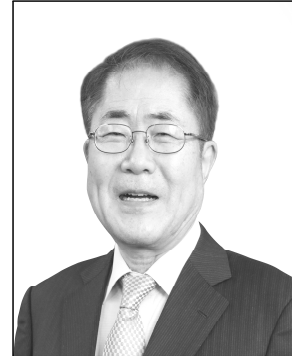
자리해주신 여러분 모두 희망과 행복이 넘쳐나는 새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일
국민의힘 예산·홍성 국회의원 **홍 문 표**

| 환영사 |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평입니다.

오늘 농특위 역할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 홍문표 의원님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아울러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농수산물식품분야도 경영 부담이 심화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는 등 복합적인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기후 변화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고, IT·BT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농어업·농어촌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어업, 농어촌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끌어내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며, 이와 관련하여 농특위 역할에 대한 농어업계의 기대와 요구도 클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소속 농특위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와 통합하여 기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농특위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농특위는 부여된 위상과 기능에 맞춰 농어업계와 정부, 국회 등과의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농정의 실마리를 풀고 협력을 촉진하는 농특위의 역할 정립에 있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한분 한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태 평**

| 축 사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시기에 대통령 소속 자문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문표 의원님,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과 농특위는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농촌의 활력을 회복해야 하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원자재 공급망 불안과 물가 인상 위협이 현실화 된 가운데, 영세한 경영 규모와 낮은 기술 수준이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FTA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촌의 고령화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인구 유출은 심화되어 농촌의 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업·농촌이 사면초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사실이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첨단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B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산업 등 농업의 미래와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 새로운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 무인자동화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벤처 투자사가 참여하는 농식품 펀드를 조성하는 등 비농업부문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존의 농촌 공간을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혁신하고 성장하는 역동적 농업·농촌으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특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수 위원회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가FTA 등 시장개방과 농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의·조정 기구로서 농특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존속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임 위원장으로 장태평 전 장관님이 임명되었을 때도 대다수 농업계 단체들이 환영 성명을 내어 큰 기대감을 보여 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부처간 업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신속한 정책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특위의 강점인 부처간 협의·조정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부처간 갈등을 원만히 조율하고, 미래 농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우리 농업·농촌의 이정표 역할을 해내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농특위 통합을 계기로 농업·농촌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주체인 농어업인의 삶의 질 수준도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식품부에서도 농특위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과 예산 확보 등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농업·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 농촌지역이 위기를 딛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 축 사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입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홍문표 국회의원님과 장태평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그간 농어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혁신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농수산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구심점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 수산업도 여러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수산물 수출은 31.6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산 공익직불제도’ 확대 시행,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착수 등 수산업과 어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과 어촌을 둘러싼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바다 환경의 변화 등 여러 문제들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어업인에게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양수산부도 농어업·농어촌특별 위원회와 함께 수산업·어촌의 희망찬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앞으로도 늘 수산업·어촌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일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발 제

새시대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과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시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과제

송 미 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균형발전연구단장

2023.02.02

KREI

목 차 Contents

1. 농어촌 현황	03
2.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14
3.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여건 변화	27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32

1. 농어촌 현황

3

1. 농어촌 현황 2. 삶의질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질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농어촌 인구 변화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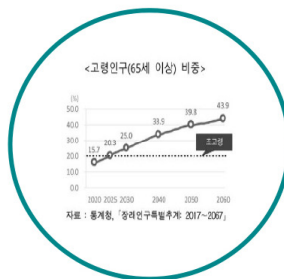
- 저출생, 고령화의 심화로 지방소멸론 대두



합계출산율 0.81의 공포

저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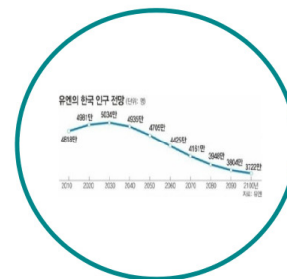
유소년 인구 비율
농촌: ('00년) 18.6% → ('15년) 12.5% → ('20년) 10.8%
도시: ('00년) 21.6% → ('15년) 14.2% → ('20년) 12.4%



초고령화의 그늘

고령화

고령화를 7% 미만 읍·면 전국 8개
고령화를 20% 이상 읍·면 전국 87.5%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00년) 14.7% → ('15년) 20.6% → ('20년) 23.0%



지방소멸 우려 현실화?

인구감소

82개 군 지역 중 72개가 인구감소
('92년 이후 정점인구 대비 '17년까지 평균 1만 7천명 감소)

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농어촌 현황

2. 삶의질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질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농촌생활 선호 문화 확산



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농어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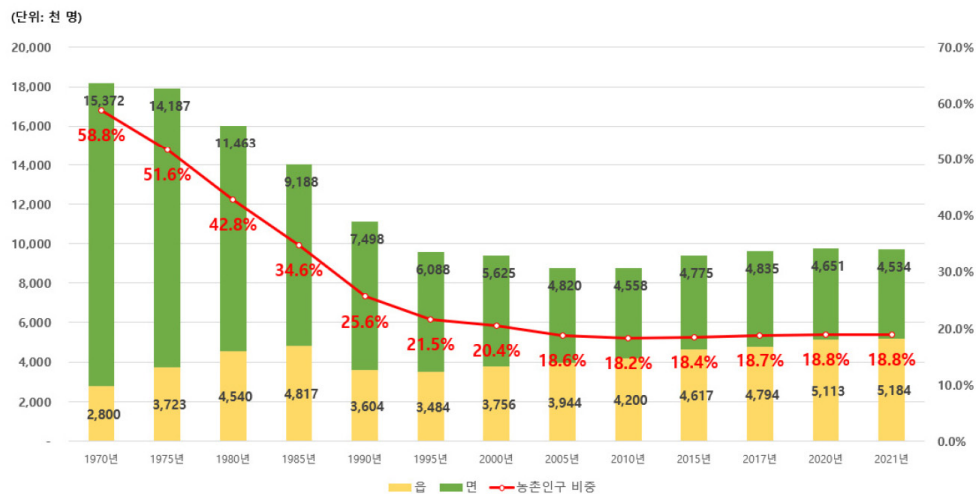
2. 삶의질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질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농어촌 인구 변화와 현황

- 지속 감소하던 농촌 인구는 2010년부터 증가하여 2021년 기준 971.8만 명(총인구의 18.8%) 거주



6

1. 농어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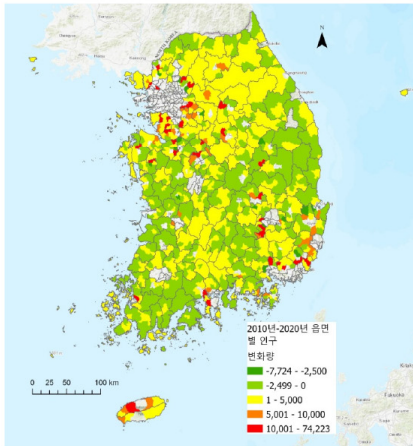
2. 삶의질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질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농어촌 인구 변화와 현황

- 수도권 및 도시 근교, 읍 지역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면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2010-2020 농촌 인구 변화량

2015-2020 수도권/비수도권 농촌 인구변화량

구분	읍면	수도권			비수도권		
		2015	2020	연평균 증가율	2015	2020	연평균 증가율
도농복합시	읍부	1,200	1,415	3.35	1,352	1,456	1.48
	면부	738	669	-1.95	1,887	1,957	0.72
	계	1,938	2,083	1.46	3,240	3,413	1.04
군	읍부	95	96	0.21	1,970	2,146	1.73
	면부	191	206	1.52	1,959	1,820	-1.46
	계	286	301	1.03	3,929	3,967	0.19
농촌 총계		2,223	2,385	1.41	7,169	7,379	0.58

7

1. 농어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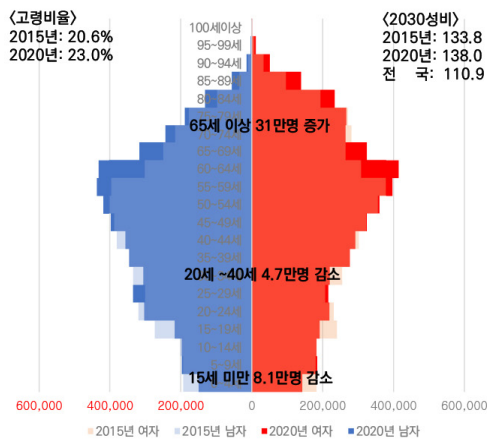
2. 삶의질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질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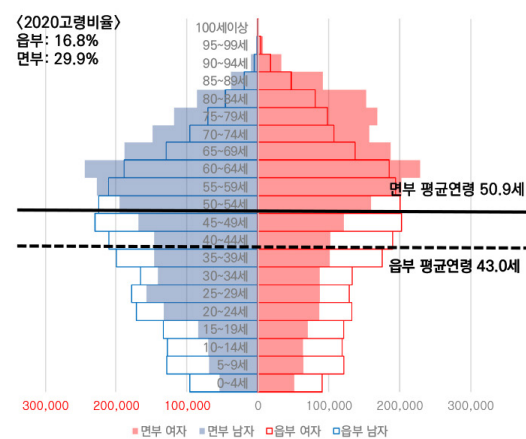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농어촌 인구 변화와 현황

- 고령인구의 증가, 젊은 세대의 인구 유출 및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는 추세



2015, 2020년 농촌 인구 피라미드



2020년 읍면별 인구 피라미드

8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농어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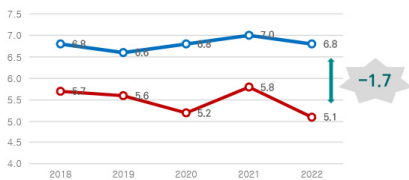
2. 삶의 질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 질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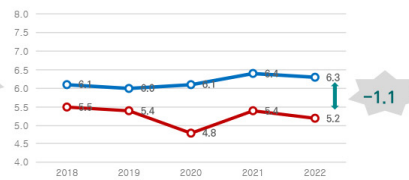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정주 환경의 도농간 격차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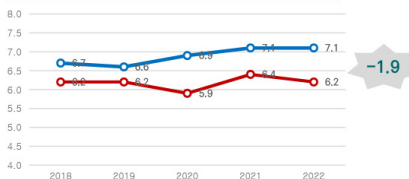
보건 복지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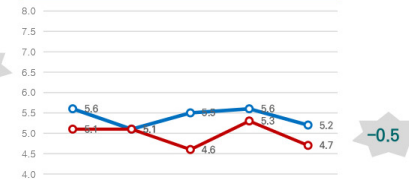
교육·문화 부문



정주 기반 부문



경제 활동·일자리 부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조사 개요: 응답자 수 3,225명 (동 855 / 읍 1,071 / 면 1,299)으로 10점 만점(0점~10점)

9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농어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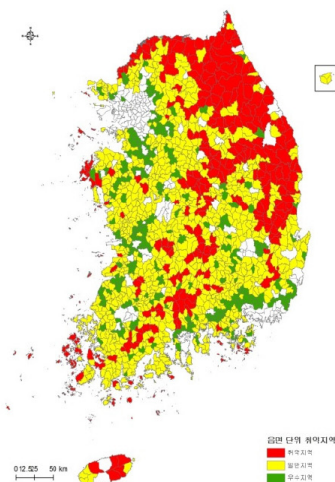
2. 삶의 질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 질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정주 환경의 도농간 격차 심화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1	'22	'21	'22			'21	'22	'21	'22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7	7.7	6.3	6.1	정주 기반	대중교통	7.3	7.2	5.7	5.3
	의료 서비스 범위	7.3	7.3	5.6	5.1		통신시설	7.7	7.8	6.7	6.9
	의료 서비스 수준	7.2	7.2	5.7	5.3		생활 인프라	7.7	7.5	6.4	6.7
	분만의료 서비스	7.0	6.8	5.2	4.3		난방 비용	-	6.4	-	5.5
	산후조리 서비스	-	6.4	-	4.0		생활 서비스	7.6	7.3	6.2	5.8
	여성 출산 지원	-	6.2	-	4.4		식자재 구입	-	7.6	-	6.3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3	7.0	5.9	5.2		다양한 외식 장소	-	7.3	-	5.8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8	6.5	6.0	5.6		주택 상태	7.0	7.0	6.4	6.2
	아동 양육·돌봄 지원	6.7	6.4	5.9	5.3		교통안전	6.8	6.7	6.4	6.2
	위약계층 복지지원	6.6	6.2	6.1	5.4		자연재해 안전	7.3	7.3	6.7	6.7
교육·문화	농어업인 안전(농어업인만)	-	-	7.0	7.1	경제 활동·일자리	범죄 안전	6.9	7.0	6.7	6.7
	부문 평균	7.0	6.8	5.8	5.1		적은 환경오염	6.8	6.9	6.4	6.4
	공교육 수준	6.7	6.8	5.8	5.8		정돈된 환경 경관	6.9	6.9	6.6	6.5
	방과 후 교육 기회	6.6	6.7	5.7	5.6		부문 평균	7.1	7.1	6.4	6.2
	평생교육 기회	6.3	6.2	5.4	5.1		일자리 용이성	5.7	5.1	5.2	4.4
	지역사회 연계 교육	6.3	5.9	5.4	4.7		일자리 충분성	-	5.0	-	4.3
	문화·여가 시설	6.5	6.6	5.4	5.2		충분한 소득	-	5.4	-	4.8
	문화·여가 프로그램	6.2	6.3	5.2	5.0		일자리 지원	5.3	5.3	5.3	4.6
	문화 공동체 활동	5.9	5.8	5.2	4.8		로컬푸드 판매	-	5.5	5.6	5.3
	지역 향토문화 기회	-	6.0	-	5.3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5.6	5.0	-	4.9
	부문 평균	6.4	6.3	5.4	5.2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	5.2	-	5.0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농촌만)	-	-	-	4.9
							부문 평균	5.6	5.2	5.3	4.7



농촌지역의 차별적인 공공서비스 접근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조사 개요: 응답자 수 3,225명 (동 855 / 읍 1,071 / 면 1,299)으로 10점 만점(0점~10점)

10

1. 농어촌 현황

2. 삶의 질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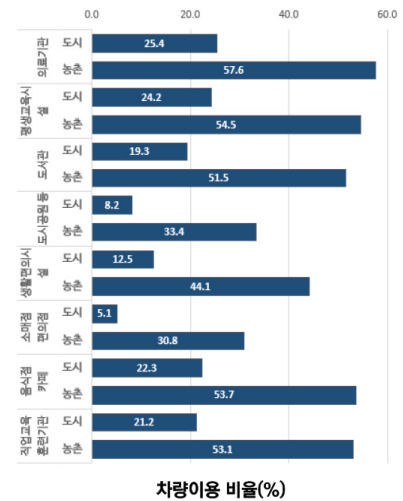
3. 삶의 질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도시에 비해 열악한 서비스 접근성

주요 서비스 시설별 차량 접근성

서비스 시설	차량 소요 시간 (분)		
	읍부	면부	동부
의료기관 (병원, 약국)	17.3	21.6	15.8
응급의료시설	21.5	26.6	15.4
노인복지 관련시설	20.5	20.5	17.9
평생교육시설 (성인교육)	24.2	24.4	21.9
도서관	14.4	20.6	15.6
미술관, 박물관 등 전시시설	32.5	28.8	24.7
생활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등	19.7	20.9	16.8
이미용, 세탁소, 목욕탕	14.0	17.6	13.8
음식점, 카페	15.3	17.6	17.5
소매점, 편의점	11.1	14.1	12.4



11

1. 농어촌 현황

2. 삶의 질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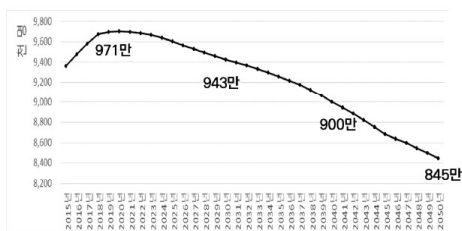
3. 삶의 질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농어촌 인구 전망

- 지속적인 저출생 경향으로 2050년 무렵 농촌 인구는 84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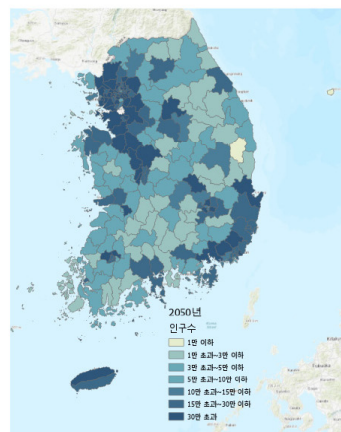
2050년까지 농촌 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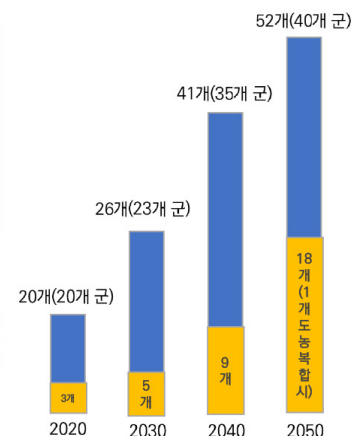
자료: 심재현 외(2018)의 미래 전망 모형에서 이동률 및 출산율을 변경하여 추계함.

〈농촌 65세 이상 고령화율〉 '15년 20.6% → 50년 30.7%

〈인구부양비〉 '15년 0.50 → 2050년 0.81



2050년 시군구 인구 분포



2만(노랑), 3만(파랑) 이하 인구 동농복합시 및 군 분포 변화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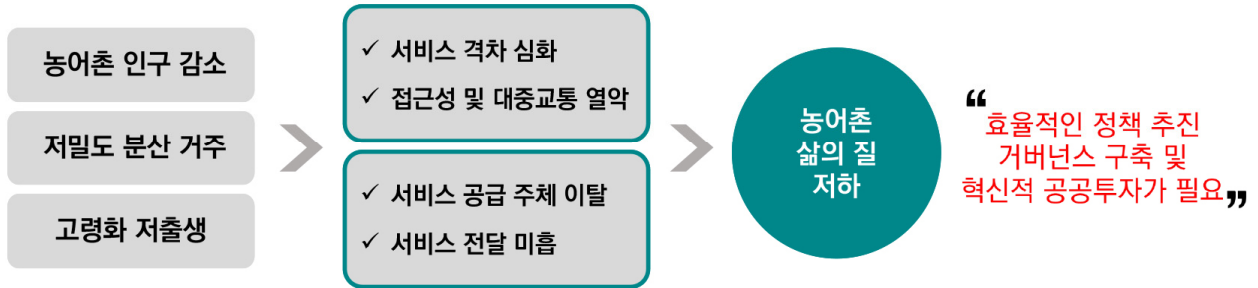
1. 농어촌 현황

2. 삶의 질 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 질 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농어촌 삶의 질 악순환 고리 단절하려면



- 인구 감소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어려움 심화
- 배후 농촌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 증가
- 생활인구 또는 관계인구 지지를 통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13

2. 삶의 질 향상 정책 성과와 추진체계

14

1. 농어촌 현황

2. 삶의 질 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 질 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삶의 질 향상 정책이란?

정부는 농어촌 주민들의 행복한 삶,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무총리 산하 삶의 질 향상위원회 구성

5년 주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삶의 질 기본계획 주요 내용

-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 ❖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여건 개선,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 ❖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 ❖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관한 사항 등

15

1. 농어촌 현황

2. 삶의 질 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 질 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삶의 질 향상 정책 발전

1~2차 기본계획('05~'14)

-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한 추진체계 구성
 - 본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 농식품부 사무국 운영
- 정책지원체계 구축
 - 전문지원기관(KREI) 지정('12)
 - 농어촌서비스기준('10), 농어촌영향평가제도('11) 등 신규제도 도입

3차 기본계획('15~'19)

- 삶의 질 위원회 기능 강화
 - 분과위 설치·운영기준 마련('15)
 - *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 전문지원기관 운영 내실화
 - KREI(삶의 질 정책연구센터) 및 KMI 지정('15)
 - 시행계획 점검·평가, 서비스기준, 영향평가 등 자체업무 수행
 - 정책지원네트워크 등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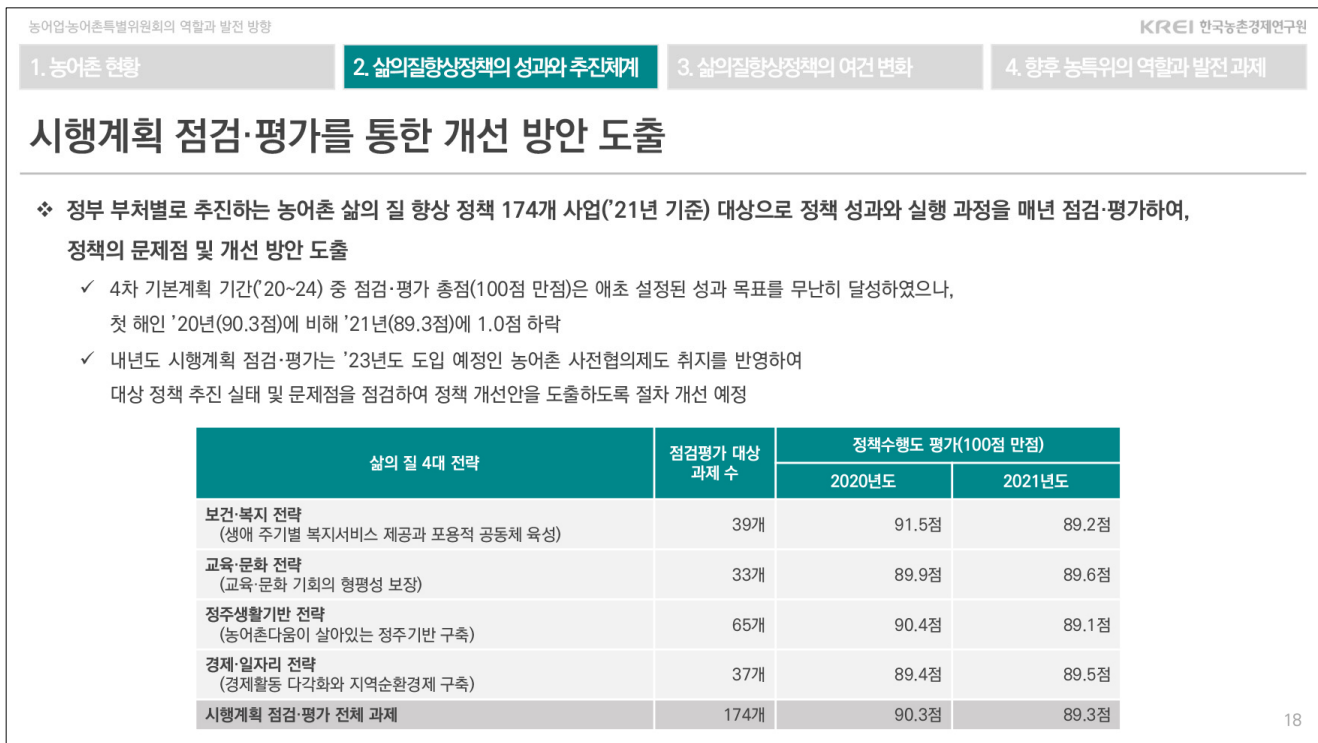
4차 기본계획('20~'24)

- 위원회의 범부처 협업·조정 역할 강화
 - 영향평가 운영지침, 사전협의 제도화 기반 정책 조정기능 수행
- 전문지원기관의 역할 제고
 - 시행계획 점검·평가, 서비스기준 등을 활용한 정책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개선
 - 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한 전반적 운영절차 마련
 - 영향평가 운영지침을 통한 연구 수행

16



17



18

1. 농어촌 현황

2. 삶의 질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 질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충의 제도적 기반 마련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률 통해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1월부터 시행, 2021년 6월 시행령 및 고시 개정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

- 4대 부문 19개 항목 중 총 12개 항목에서 목표치 달성('20년: 11개 항목 달성)



모든 항목에서 중기목표치 달성

- ✓ 영유아 인구 감소로 인한 시설 감소로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이행실태가 전년대비 하락했으나 진료, 응급의료, 노인복지 항목의 이행실태는 상향됨.



주택, 난방, 방법설비 항목은 중기목표치 달성

- ✓ 주택, 소방출동 항목은 점검 방식의 변경으로 전년도와 비교 불가
- ✓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항목은 목표치에 미달하였으나 전년대비 상승함.



모든 항목에서 중기목표치 달성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평생교육 항목의 이행실태가 전년대비 하락했으나 초·중등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항목의 이행실태는 상향됨.



중기목표치 미달성

- ✓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은 중기목표치에 미달하였으나 전년대비 상향됨

19

1. 농어촌 현황

2. 삶의 질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 질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농어촌 영향평가를 통한 삶의 질 정책 관계 부처 정책 개선

'21년 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성과



교육청 및 교육부의 통학 수단 확대 및 통학 여건 개선 유도

- (지표 변경) 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제공 비율(%) → 농어촌지역 통학수단 수혜 학생 비율(%)
- (지표 신설) 유아·저학년 어린이용 보호장구 설치 차량 비율(%)
- (사업 개선) 농어촌 통학차량 안전기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교육부), 지방교육청 자체 점검



대중교통 소외지역 거주 주민의 체감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 (지표 변경) 이용자, 운행 대수 등 정량지표 →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율(%)
- (사업지침개정)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국토부) 시 소외지역 해소율이 낮은 읍면 지역에 우선 사업 실시

2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농어촌 현황

2. 삶의질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질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농어촌 영향평가를 통한 삶의 질 정책 관계 부처 정책 개선

'22년 영향평가 정책과제 대상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해소
(복지부)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복지부,
농식품부)

'22년 영향평가 추진

'23년 위원회 보고를 위한 영향평가 추진 중 사업개선, 지표개선 등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조율 중

2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농어촌 현황

2. 삶의질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질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국정과제 성과 지원

조사 개요

- 2012년부터 매년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를 측정
- 농어촌 주민 2,300명, 도시민 8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
-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이자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척도로 활용

조사 대상, 기간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22.10.07~'22.11.04)
표 본 수	총 3,225명 (동 지역 855명, 읍·면 지역 2,370명)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1.73% Point 무한 모집단 기준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Online Survey) 방문 면접 조사 (Face-to-Face Interview)

윤석열정부 국정과제70
농산촌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기대효과] 농촌 삶의 질 만족도 수준 향상

('21: 5.7점(도시 6.5 수준) → '27: 6.7점)

22

1. 농어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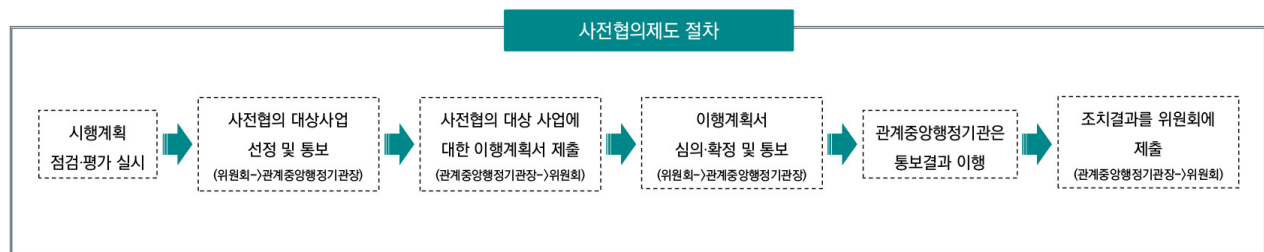
2. 삶의 질 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 질 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통한 시행계획의 환류체계 강화 (2022.12. 시행)

- ❖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사전 협의의 대상으로 지정
- ❖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제도 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담보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



23

1. 농어촌 현황

2. 삶의 질 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 질 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삶의 질 향상 정책 관련 작은 우수사례들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제공



“고창 이등식놀이교실”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이주민들을 위한 다문화도서 대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장난감, 도서 대여와 여러 프로그램 제공하여 경제적 도움이 됨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영동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창업상담, 직업훈련,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경제지원 서비스 제공
친환경 소재 인공 토양을 활용한 화분 판매, 영동 포도 와인카페 등의 창업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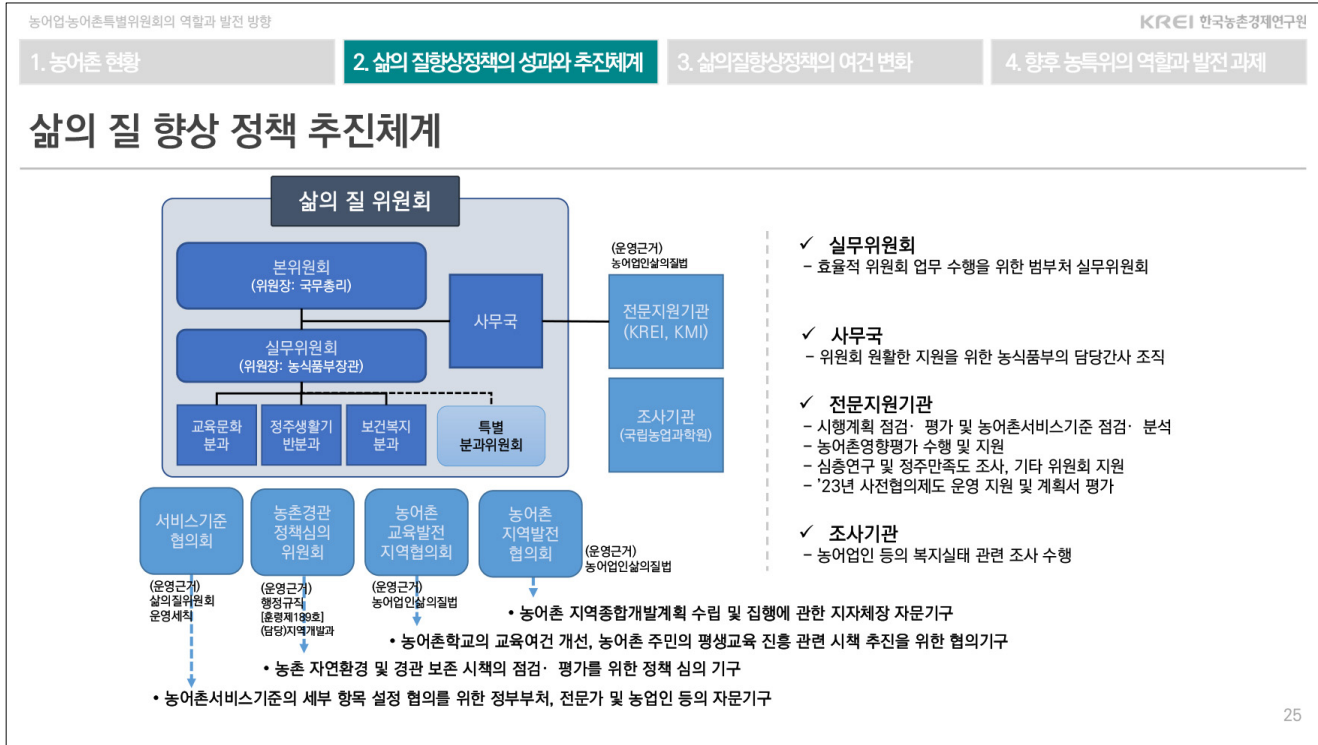
농촌 빈집정비 및 활용



“합천 마을지기목공소”

사용하지 않던 관용차고를 목공교육, 제품판매, 봉사활동 등 지역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활용

2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농어촌 현황
2. 삶의 질 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 질 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한계

- 1) 범부처 정책으로서의 도입 취지 약화

 - 정책 수혜자인 농어업인, 노인 등 특정 인구 계층 위주로 추진
 - 청년, 여성,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별 수요 대응에 한계 존재
 - 제1·2·3차 기본계획 기간별 부처 예산 중 농식품부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타부처 비중은 점차 감소
 - 삶의 질 향상위원회의 부처 간 협력 및 조율 기능이 미흡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성과 창출에는 한계

- 2) 농어촌서비스기준 등 필수 수요를 지원하는 정책수단 불충분

 - 항목별 이행실태 개선과 직접 관련된 시행계획 사업은 일부에 불과, 해당 사업 또한 성과 창출에 한계 존재

- 3)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및 정책 환류 미흡

 -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1~3차 기본계획 기간마다 점검평가 방식을 개선하였으나 환류 문제는 계속 상존
 - 타부처 정책에 대한 환류 수단으로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적극적인 활용 부족

- 4) 농어촌 삶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미미

26

3.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여건 변화

:농특위, 삶의질향상위 통합

27

- 1. 농어촌 현황
- 2. 삶의질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 3. 삶의질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농특위 역할 및 주요 성과

위원회 목적 및 구성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 위원장 1명 포함, 정부위원 5명, 위촉위원 24명 이내로 구성된 본위원회와 3개 분과위 및 특별위, 사무국 30여명으로 구성

주요 성과

-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 경자유전원 원칙 달성을 위한 법률 개정
- 지방분권화를 위한 농정토대 마련
- 농어촌 특화 사회적경제모델 확산
- 임업직불제 도입기반 마련
-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흡수 증진기반 마련
- 국가식량계획 수립 지원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 어촌지역 소멸 대응 전략 의결 및 해수부 대책 마련 지원
- 지속가능한 수산업업을 위한 연근해업 혁신 방안 마련
- 어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지원
- 여성농업인 정책 기반 확립

28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전 방향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농어촌 현황

2. 삶의질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질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새정부의 농어촌 정책 방향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70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농촌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 기대 효과 “농촌 삶의 질 만족도 수준 향상(‘21: 5.7점 -> ‘27: 6.7점)”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 농어촌 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 농어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고령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 농촌공간이 주거, 생산, 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
-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22)
- 장기계획에 대응하여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진(400개소 지원, ~‘31)

29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전 방향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농어촌 현황

2. 삶의질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질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농특위와 삶의질위원회의 통합 기반 마련

- 행정안전부 정비 추진계획(‘22.07.05.)에 따라 삶의질위원회를 농특위로 기능 이관 추진 결정
 - 기능 이관을 위해 농특위법, 농어업인삶의질법 일부 개정안 발의
 - ※ 국회 농해수위 접수(‘22.09.30. 정부발의) 및 상임위 회부(10.4)
 - 농특위 위원은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예정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삶의질기본계획)’은 농특위 심의를 받도록 함
- 농특위는 종전보다 조직이 확대되고, 삶의질기본계획 등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도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집행 기능이 없다는 한계 지적을 받았던 농특위 기능이 일부 보강될 예정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7일, 「국무총리실 산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통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들 두 위원회는 유사한 운영 목적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와 관련 부처의 참여 체계, 권한의 범위와 다루는 구체적 정책 내용·대상 등이 상이하다. 게다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024년까지 유지되는 한시기구일 뿐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 연말에서야 위원장이 임명된 상황이다. 농어촌 주민이 직면한 삶의 질 저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의 재정비 작업에 ‘속도’와 ‘실질’을 더 할 시점이다.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나은식, 김기, 5441, 노민
출처: 2023.10.10. 451면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나은식, 김기, 5441, 노민
출처: 2023.10.10. 451면

30

1. 농어촌 현황

2. 삶의질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질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통합 농특위의 제약 요인 해소 필요

- 농어업·농어촌 이슈에 대한 장기적·연속적 활동이 필요하나, 법령상 존속기한 설정으로 인해 연속성 유지에 문제 발생
 - 취약한 농어업, 농어촌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농특위 역할에 대한 농어업계의 요구가 지속
 - 대통령소속 타 위원회는 존속기한이 미설정되었음을 감안할 필요
- ➔ 농특위 존속기한 규정(농특위법 제13조) 삭제 추진 필요

< 대통령소속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비교 >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국가 우주 위원회	규제 개혁 위원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농어업· 농어촌 특별 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국민 통합 위원회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
설치 근거	경제사 회노동 위원회법 제1조	우주기발 진흥법 제6조	행정규제 기본법 제23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23조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제22조	국민통합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조)	디지털플 랫폼정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조)
존속 기한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2024. 4. 24. 법 제13조	미설정	미설정	2027. 5. 31.	2027. 7. 1.
근거	-	-	-	-	-	-	-	운영규정 제14조	운영규정 제14조

31

4. 통합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농어촌 삶의 질 정책 추진의 지속성 확보 시급

❖ 농특위가 '24.4월로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음에 따라 존속기한이 없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정책 추진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

→ 농특위의 기간 연장 혹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과 같이 존속기한 삭제 필요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발현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이슈별 정책 대응을 넘어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통합 농특위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자문 기구 성격인 농특위에 점검, 평가 및 환류 등의 기능을 지닌 삶의 질 위원회가 통합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

→ 대표적 부처 협업 정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특위의 정책 평가 조율 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 농특위원회의 구성의 전문성 강화 필요

→ 보건복지, 문화, 지역개발, 환경,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전문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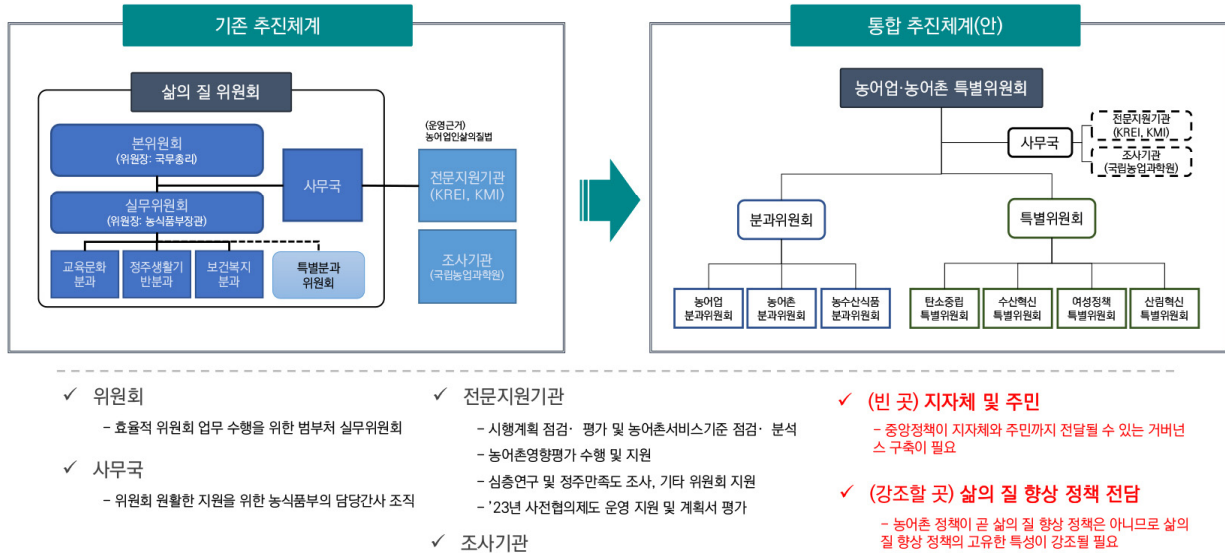
1. 농어촌 현황

2. 삶의 질 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 질 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 확대 및 강화 필요



35

1. 농어촌 현황

2. 삶의 질 향상정책의 성과와 추진체계

3. 삶의 질 향상정책의 여건 변화

4. 향후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과제

삶의 질 향상 관련 직접 사업 추진

❖ 삶의 질시행계획 상 정책 사업은 부처의 기존 사업 중 농어촌과 연관성 높은 사업들의 묶음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조정)하여 가시적 성과 도모 필요

➔ 농어촌삶의 질향상기금(가칭) 등의 신규 재원 등을 마련하거나 농특위 차원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업 발굴

- 지역마다 사람, 기술, 재정 여건이 다른데 일률적 정책 내지 예산 하달 의미 없다.
지방과 농촌의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어서, 단일 부처의 힘이나 정책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것을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에 살든 울릉도에 살든 누리며 살아야 할 최소 수준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2022.10.24. "균형발전" 모범국 프랑스, ..." ANCT 방문 인터뷰 중)

36

기타 과제

1) 범부처 협업 과제를 중심으로 한 핵심과제 발굴

- '23년 위원회 통합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응 및 정책 성과 증진 도모방안 마련
- 환경부, 행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 협업 지원
-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핵심 아젠다 발굴

2) 전문지원기관(KREI, KMI) 지원

- 역할분담, 협업, 전문성 강화 및 지속성 확보
- 농어촌 모니터링 (ex: 프랑스 CGET 국토관측소) 기능 강화
- 삶의 질 정책사업 관리, 평가 등을 위한 농어업인삶의질진흥원(가칭) 설립 등

3) 삶의 질 정책 활용 확대

- 농발계획, 농촌공간재구조화계획, 농촌협약 등에 적극적 활용

4) 농어촌 현장에서의 체감도 향상 노력

37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mrsong@krei.re.kr)

지정토론

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 (농어업계의 큰 기대를 받고 출범한 농특위) 범부처적으로 협력과 조율할 사안이 많은 농정 관련 이슈를 논의할 대통령소속 자문기구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4월 25일 발족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계의 큰 기대 속에 출범했음.
 -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19년 4월 25일 시행 후 5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현행 법률상 2024년 4월까지 유지)
- (새 정부에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 농특위) 지난해 5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행안부의 대통령·총리·부처 소속 636개 위원회의 정비방안(2022년 7월 계획, 9월 확정)에 따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기존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흡수·통합하는 형태로 존치·운영하기로 최종결정함.
 - 이는 종전보다 농특위의 조직, 역할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농특위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오늘의 토론회는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유일한 대통령소속 자문기구로서의 실질적 역할 정립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이 홀대받거나 패싱”되지 않기 위해서도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 생각함.
- (농특위 존재의 의의) 대통령소속의 민·관 합동 자문기구로서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련 부처간 소통과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농어업·농어촌 구현을 위한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구심체 역할 수행이 요청됨.

- (지금까지 성과와 한계)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한 농특위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농어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큰 틀의 정책 전환이나 공감할 만한 성과는 미흡했다고 평가되며, 그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판단됨.

- (1) 첫째, 농특위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대통령과 관련 행정부처의 활용 의지력과 추동력 부족(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후 그것도 농어업계의 요구로 늦게 출발,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른 대통령소속 위원회보다 늦은 위원장 선임 및 위원 구성 등)
- (2) 둘째, 농어업·농어촌 관련 여러 부처의 연관 복잡한 사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실천적으로 추진할 관련 정부 부처와의 실질적 소통 및 협력체제 구축 미흡, 특히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 참가와 농특위 활용 의지 미약(예: 농특위 본회의 당연직 정부위원 참석 거의 전무)
- (3) 셋째, 너무 많은 의제와 이슈에 대한 시간 소모적 논의, 그리고 주요 정책과제별 연구 중심적 결과 논의로 인한 기존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부족, 핵심적 어젠다 발굴과 실천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적 공감대와 시선 끌기 실패 등이 핵심 요인으로 판단됨.

- (농특위의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 농특위 역할과 위상 강화

- (1)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원천적 한계가 있으나 무엇보다 대통령의 농특위 역할과 기능, 운영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지금까지 경험상 대통령의 농특위 자문에 대한 적극적 활용 의지와 밀접히 연관되는 관련 부처의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의제와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실천전략이라도 이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2) 또한 농특위 존속 기간의 연장 혹은 존속 기간 삭제를 통해 지속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현행 법률상 농특위는 2024년 4월까지 존치되는 한시적 기구로서 앞으로 1년 남짓 남아 있는 시한으로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주기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범부처적 소통과 협력이 요청되는 농어업·농어촌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실천하기가 불가능함.

- (3) 앞으로 농특위로 통합되는 삶의 질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범부처적 협력과제가 실제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권한, 인적 구성과 조직 등의 확충과 재정비가 요청됨.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2004년 출범한 삶의 질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15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시적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특위와 달리 미약하지만 관련 정책을 총괄·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5년마다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음.
 - 향후 농특위 관련 법령 개정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정책을 총괄·조율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삶의 질 위원회의 장점을 잘 통합하여 농특위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4) 너무 다양한 의제보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업/농어촌, 범부처적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농정 이슈에 초점을 두되 미래지향적 청사진과 로드맵, 발전 전략 등 마련에 지 중할 필요가 있음.
- 정책목표와 방향 설정, 명분과 논리적 정당성, 실현가능성, 제도화가능성 염두에 두고 결집된 노력과 역할분담 제시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간 소통과 협력,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도출에 기여해 나가야 함.
- (5) 이전 정부의 농특위 1기와 2기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심층적 성찰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것은 계승해 나가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새롭게 출범하는 농특위 3기는 보다 범부처적으로 해결해야 할 농어업·농어촌 관련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농특위와 가장 밀접히 연관되는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범부처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농특위 활동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임.

지정토론

②

**미래세대가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농어업
농어촌을 위한
대통령소속 농특위의
역할을 기대**

전병설

(한국4-H본부 회장대행)



미래세대가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농어업 농어촌을 위한 대통령소속 농특위의 역할을 기대

2019년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농특위가 출범함에 따라 대통령이 농어업과 농어촌을 직접 챙기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범부처가 협력해 새로운 농어업 농어촌의 비전을 실현해 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농특위 출범 4년이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농어촌 현장에서는 농특위의 역할과 성과를 뚜렷이 체감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농특위가 농어업 현장의 의견을 담아낼 범정부 차원의 기구이자 유일하게 법령이 정한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농업계로서는 농특위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확대되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

새시대를 맞아 농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농정공약의 지속적인 점검과 임기 내 이행을 촉구해 줄 것과 함께 협치기구로서 범부처와의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농어업 농어촌의 비전과 방향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그 기대 중에서 이 자리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세대인 4-H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농어촌 농어업이 미래세대의 삶터와 일터로서 존재하기 위해 농특위에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인력의 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특위가 청년농어업인 육성과 함께 농어촌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갈 청년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통계청 농림어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어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농어가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인구 자체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 면적의 93.3%를 차지하는 비도시지역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전체인구의 9.2%에 불과하다.

지역소멸 이슈가 사회적 화두가 되며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역의 청년농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업인, 농어촌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난항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안부 사업을 일례로 말씀드렸지만 농특위가 농어업 농어촌에 청년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범 부처정책을 파악해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 범부처 정책이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해서 농어촌정책과도 섬세하게 결합 되도록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고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과도 소통,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청년들의 정주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기본적으로 농어촌은 복지, 의료인프라, 교육·문화시설 등 청년층의 거주에 필수적인 정주환경 요소가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국무총리실 산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와 농특위의 통합이 결정됐다. 농어촌이 청년들의 삶터, 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농특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농특위와 삶의 질 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다를뿐더러 관련 부처의 참여체계, 구체적 정책 내용이나 대상이 다소 상이하다. 더구나 농특위는 법령상 2024년까지 유지되는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다.

농특위가 책임감을 가지고 범부처를 조율하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로의 변경 등 조속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청년 청소년세대의 교양농업교육과 농업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농특위의 역할을 주문한다. 서울대 정진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고, 농업의 공익기능에는 공감하지만 농업관련 직업 의향수준은 매우 낮다고 한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진로지도는 대부분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어업계 특성화고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농어업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비교과과정으로 이뤄지던 학교4-H회 등의 농업 관련 동아리활동도 교육부 방침의 변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위축되고 있다.

청소년기 진로교육이 대부분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이뤄지다 보니 진로의 내용이 대체로 진학 또는 도시지역으로의 취업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향으로 특히 농어촌청소년에게 농어촌이 계속 삶이 유지되는 공간이 아닌 진로를 위해 떠나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이 준비되고 있는데 관련 계획안에 농어촌청소년에 관한 내용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한국4-H본부를 포함해 지역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따로 정책을 제안했지만 어느정도나 반영이 될지는 알수 없다.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농어촌청소년들이 국가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소외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자녀를 낳아 청소년으로 키우며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

농어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농어촌에서 성장하고 정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농어촌이 소외되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진로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는 농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구조를 포함한 스마트농업의 확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예비 청년인력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조차도 교양농업 교육이나 농업진로교육 기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 중 농업생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비율은 0.8%에 불과하고, 농업관련 전후방산업을 희망하는 비율도 8.2%에 불과했다.

농어업 농어촌이 미래세대에게 소외되는 문제는 꽤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그간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농업계의 힘으로만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해서는 청년인력이 필요하고, 청년인력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농어업 농어촌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이 육성되어야 한다. 대통령소속 농특위가 범부처를 아우르며 정책과 농어업 현장을 잇는 역할을 보다 강력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농특위가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도 조속히 정비해 나가길 바란다.

지정토론

③

새롭게 출발하는 농특위의 모습

류정곤

(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 소장)



새롭게 출발하는 농특위의 모습

농어촌은 농어업이라는 산업을 기반을 형성된 지역사회 공동체 조직의 하나이다. 산업화가 이뤄지기 이전의 우리나라 농어촌은 가장 많은 국민들이 생활하던 곳이었고, 중요한 국가식량산업인 농어업을 지탱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은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와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 심화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기능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은 더욱더 초라해졌고 거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으며, 고령화 가속화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의 농특위는 이러한 농어업, 농어촌 및 농어업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 자문기구로 2019년 출범하였고, 지난 3년여에 걸쳐 그 어떤 대통령소속 위원회보다도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러나 신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특위 존폐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2022년 7월 삶의 질 위원회와 통합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어 도리어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

농특위의 역사는 UR 파고가 거세게 밀려올 때 김영삼대통령 시절인 1994년 2월에 설립한 농어촌발전위원회(일명 농발위)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김대중대통령 시절인 2002년 1월에는 법률에 의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소속기관으로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일명 농특위)를 설립하고 2009년 12월까지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약 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면 삶의 질 위원회는 2005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지금까지 약 18년간 상설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특위와 삶의 질 위원회 설립 배경은 농어업, 농어촌 및 농어업인의 문제를 단순히 일반적인 산업·지역·국민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근간에 관한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인식한 것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즉 안정적인 국가 식량 확보, 국토 균형발전 및 인구분산을 위한 농어촌 붕괴 방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기능 보전을 위하여 두 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농특위와 삶의 질 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선 농특위는 대통령소속으로서 부처 합의도출이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기구라는

한계와 농특위가 의결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한 정책이 정부의 협력 없이는 실행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삶의질 위원회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법정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계획이 집행되는지 점검·평가하고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질 및 지역개발의 효과 보다는 수많은 보여주기 식의 정책들만이 있다는 비판과 총리 직속으로서 부처 간 합의를 통한 정책시행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농특위와 삶의질 위원회의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농특위 업무 영역은 농어업 및 농어촌에 관련된 모든 분야, 즉 산업, 지역, 농어업인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다루고 있다. 반면 삶의질위원회는 주로 삶의질에 관련된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등을 다루고 있으나 경제·일자리 분야도 취급하고 있어서 농특위와 상당부분 겹치고 있다. 따라서 두 기구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통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새롭게 탄생할 위원회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아젠다로는 ①확실한 식량주권 확보, ②혁신적인 지속가능한 농어업 구조 재편, ③안정적인 농어업인 소득 보장, ④농어촌 지역소멸 방지, ⑤기후위기 대응력 제고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①위원회 상설화, ②대통령소속 기구화, ③정책 집행 실행력 부여, ④분야별 전문화, ⑤정책 수요자 중심 운영체제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수많은 정책이 난무하는 것은 무정책이라 해도 무방하다. 정책이 많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정책효과가 많았다는 소리를 듣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정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확실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

농업·농촌·농업인의 문제 매우 심각하다. 하지만 어업·어촌·어업인의 문제는 그 이상이다.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으로 두루뭉술 묶어서 논하지 말고 각 분야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2021년 지역 소멸지수를 보면 도시 1.208, 농촌 0.341, 어촌 0.330, 섬 0.234이다. 동 기간 삶의질은 도시 7.1, 농촌 6.7, 어촌 5.2, 섬 5.0이다. 또한 어촌의 소멸 고위험도는 현재 70.4%에서 2045년에는 약 87%가 될 것이라 한다. 더욱이 사라져가는 섬마을이 늘어나고 있다. 즉 유인도가 국가 공식통계상 무인도로 분류되는 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으로 묶어서 대책을 마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정토론

④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특위를 기대하며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특위를 기대하며

1. 논의배경

- ‘농어업인삶의질위원회(삶의질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통합 방침에 따라 농특위로 기능이 이관·통합될 농특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내실있는 논의·검토 시작
 - 농특위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대통령소속)
 - 삶의질위원회 :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정책의 심의·총괄·조정을 위한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그동안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해온 대통령 자문기구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효과적 통합방안과 기능·역할 강화방안 논의가 필요

2. 제안사항

① 한시 조직의 존속기한 삭제를 검토

- (상황) ‘농특위법’에 의해 한시적(5년)으로 설치·구성·운영하고 있는 농특위에 ‘삶의질 특별법’에 따른 삶의질위원회가 기능 이관
- (제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근거(농특위법 제13조-존속기한)를 삭제하여 존속기한이 없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이 필요

② 협의+점검+조정기능 등 역할 검토

- (상황)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농특위의 권한은 협의(농특위법 제2조)와 협조요청(농특위법 제 11조)에 그쳐 왔음
- (제안) 삶의질+지역개발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가진 삶의질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하여 정책점검·평가 기능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필요

③ 농어업·농어촌 포괄이슈 환류 검토

- (상황) 예산+농업+해양+식품 중심의 정부 부처 위원(농특위법 제3조)으로 농어업·농어촌이 담고 있는 포괄적인 정책이슈의 환류에 제한
- (제안) 농어업·농어촌·삶의질·지역개발 등을 포괄하는 ‘복지+지역개발+문화+환경+교육’ 등을 담당하는 부처의 참여가 필요(삶의질법 제10조)

④ 전문적 업무추진의 지원기관 검토

- (상황) 삶의질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지원의 전문기관 지정·지원(삶의질법 제46조)이 있지만, 농특위는 별다른 전문기관 지원 근거가 없음
- (제안) 농어업·농어촌 정책이슈 전반에 걸쳐 분야별 지원기관의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내용적으로 전문적인 업무추진이 필요

⑤ 지역·현장 농정추진 운영체계 검토

- (상황) 삶의질위원회는 실무위원회와 지역위원회(삶의질법 제10조+2), 농특위는 분과위원회(농특위법 제8조)로 운영되어 현장참여에 제한
- (제안) 농어업·농어촌의 포괄적 정책의 협의+점검+조정 기능을 담아내기 위해 지역(광역) 운영체계 마련과 지역대표의 참여 등이 필요

⑥ 농어업·농어촌 사회적 지지 도출 노력

- (상황)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여건과 기반은 낙관적이지 않음
 - (제안)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지지·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이슈(먹거리+돌봄 등)를 중심으로 농정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
- 첫째, 농어업·농어촌 정책이 ‘국가적 수준’에서 혁신·상승하는 실행구조로의 전환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부처협업, 정책조정, 포괄이슈 등)
 - 둘째, ‘지역적 수준’에서 농정의 성과·효과가 현실화되는 ‘현장역량’ 유지와 ‘삶의질’ 개선의 총괄기구고 기능하길 기대(지역근거, 역량, 현실체감 등)

지정토론

⑤

토론회 의견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토론회 의견

- 삶의질향상위원회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통합되는 것을 기점으로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그런데, 농특위와 삶의질향상위의 통합이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통합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기존 업무와 추가된 삶의질정책 업무와의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 구성, 삶의질향상정책 추진체계의 조정 없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곳곳에 남아 있음.
- 단순히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두 위원회가 결합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크게 삶의질향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농특위의 역할, 그리고 새로운 거버넌스의 추진체계에 포함되는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역할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것임.
- 먼저, 농어촌 삶의 질은 농어업인 중심의 이슈를 넘어 농어촌 전반에 걸친 사항이기에 농특위의 기존 업무체계로만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단순히 삶의질향상계획 수립 및 심의를 넘어 다부처 사업 평가 및 사업내용 조정, 부처 간 이견 조율뿐만 아니라, 각종 조사 업무, 삶의 질 증진 및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 업무까지 농특위의 역할이 확장될 것임.
 - 하지만 현재는 삶의질법에서 위원회 구성 조항만 삭제하는 형식으로 통합되어 있기에 농특위 내에서 삶의질위원회의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임. 예를 들어 기존 삶의질향상 본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에서 부처 간 업무 조율 등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존재했는데, 지금은 조항 삭제로 실무위원회가 사라져 그 역할과 과정이 없는 상태임. 부처 간 협업 계획인 삶의 질 정책이 이러한 상황에서 잘 조율될 수 있을지 걱정임.
 - 따라서, 통합된 농특위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며,

조직 구성과 역할 분장의 개편도 필요한 상황임. 다행히 농특위가 이러한 점을 고민하고 있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에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됨.

- 농특위 위원을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은 있지만, 보다 내실 있는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무국의 역할, 이를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역할 또한 중요하므로 위원회 통합 시 삶의질정책의 사무국과 전문지원 역할을 담당할 인적 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존 삶의질향상정책의 추진체계의 주요 축인 전문지원기관들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여년 동안 삶의질정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사무국을 지원하여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등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역량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것을 통합된 농특위로 효과적으로 연계·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전문지원기관의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통합된 농특위에서 초기에 삶의질향상정책을 잘 자리매김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성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더불어, 전문지원기관은 계획수립, 정책 추진 방향설정 및 개선을 위한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농특위 사무국은 부처 간 업무협약 및 조율 등으로 역할을 명확히 분장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전문지원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사무국(농특위)과 예산지원(농식품부)이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전문지원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통합된 농특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출연금 형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혹은 발표에서 제시한 바와 “농어촌삶의질진흥원” 등을 설립하여 삶의질 향상 관련 직접 사업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농특위가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됨.
-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질향상정책을 포함하여 농특위가 농어업인가 농촌주민, 나아가 우리 국민을 위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보다 확대된 역할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특위의 존속기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음. 존속기한이 없던 삶의질향상정책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지정토론

⑥

농특위의 역할 재정립과 강화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특위의 역할 재정립과 강화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지역개발, 복지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관련된 대통령 자문을 위해『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제정 및 위원회(대통령소속) 발족('19.4)
 - 농어업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를 비롯한 분과위, 특별위 등 소규모 위원회를 다수 구성·운영하여 논의 활성화 및 사회적 관심 환기
 -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현안 이슈 및 다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부처간 의견 조율 및 합의 도출 등 성과 달성
 - * 농특위 발족이후 '22년 말까지 총 28개 과제 심의·의결
- 다만, 별도 위원회인 농특위 특성상 의제 선정, 처리 및 심의·의결과정에서 다소간의 아쉬운 점도 존재
 - 의제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처가 소극적으로 대응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재하고, 의제의 범위와 폭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전문가풀로는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워지는 문제 발생⇒ 윤석열 정부의 농정 목표에 맞는 성과 도출을 위해 신속한 체제 정비 및 활동역량 확충이 필요한 상황
- 농식품부는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편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농정가치를 전환하고자 함
 - 민간의 자율과 창의·혁신을 기반으로 민간·시장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원하는 환경, 건강, 나눔·상생 등 사회적 가치 달성과 현장 중심의 상향식 농정으로 변화
 - 가루쌀, 밀, 콩 등 중요 곡물의 대규모 집중생산 체계 구축과 함께 안정적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가 경영 유지를 위한 직불제 등 경영 안전망 강화

- IT, BT 등 신기술과 융합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산업, 반려 동물 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청년농 집중 육성 및 스마트팜 등 디지털·스마트농업 확산

⇒ 새로운 농정가치 정착에 농식품부와 농특위의 역할 중요

- 부처간 업무 경계가 지속적으로 허물어지면서, 부처간 이견 조정 및 합의 도출 능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

- 특히, 농식품부의 미래성장산업인 푸드테크, 바이오산업 등의 성공을 위해서는 첨단 IT, BT 기술이 필수적이며, 관계부처 및 민간의 적극적인 공감과 동참이 필요함
- 지역(농촌)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부처가 각자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합·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정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

- 대통령소속 위원회라는 구조적 강점과 그간 현안 조정·협의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농특위가 앞장서서 이슈를 선점하고 현안·갈등 과제 조정·협의 도출 필요

- 다부처 협업과제, 중장기 정책 방향, 사회적 합의 필요 과제 등 부처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다부처 협의 논의 구조 공고화
- ‘의제화-논의-평가 및 환류’ 논의 전 과정에 관계부처 참여를 확대하여 협조를 유도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보고)를 정례화하는 등 실행력 제고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필요시 국민통합위원회, 균형위 등 타 위원회와 협업 추진

* (협업 사례) 자치분권위와 균형위 공동으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 발족 및 ‘균형발전성과와 총 광역협력지원전략 보고회’ 개최(21.10)

- 특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통합을 계기로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제 발굴 및 선점

- 도시와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의료·교육 등)를 선정하고, 주관 부처와 함께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등 부처의 관심과 동참 독려

- 농식품부에서도 농특위가 주도권을 갖고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

- 농특위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를 추진하여 위원회가 안정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타 법령개정 및 예산확보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음

지정토론

⑦

수산정책의 현안과 추진 방향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국장)



수산정책의 현안과 추진 방향

1. 그간 수산정책 주요 성과

- (어업인·어촌) 어촌뉴딜300 사업('19~'24) 및 어촌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8~'22, 46개소) 추진 등을 통해 어촌 정주여건 개선
 - 조건불리 직불제의 최초 도입('14) 이후 단계적 확대, 수산공익직불제 도입('21)을 통해 어업인 소득안정 기반 구축
- (어선어업) TAC 확대 및 정부 직권 TAC 설정(「수산자원관리법」 개정, '19.2), 감척 확대·폐업지원금 상향 등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 기반 마련
 -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19.8)하고, 노후어선 대체 지원('14~), '어선안전정책과' 신설('20.3) 등 안전 강화
- (양식어업) 동·서·남해 주요 거점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신기술(디지털육종, 육상순환여과 등) 개발 등 양식산업 혁신 본격화
 - 인증부표 보급·확대('15~) 및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22.11), 수산부산물 처리·재활용 등 친환경 양식 생산기반 조성
- (수산식품산업) 「수산식품산업법」('20.2) 및 「김산업육성법」('20.12) 제정, 전남·부산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체계적 산업육성 기반 마련
 - 「수산물유통법」을 제정('15.3)하고, FPC 및 FDC 조성, 위판장 현대화 등을 지속 추진하여 유통 인프라 개선

2. 정책 여건과 전망, 추진 과제

●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절실

- 어촌은 사회 서비스 및 정주여건이 도·농보다 열악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
전망

* '15년 대비 '21년 인구 증감률(%) : 전체 1.0, 농가 △7.3, 어가 △26.9

도시/어촌 고령화율(%) : ('05) 7.1/18.8 → ('10) 9.1/23.1 → ('20) 14.6/36.0

● 어업관리를 자원관리형으로 선진화 필요

-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수산자원 회복이 더딘 상황이며, 투입규제 중심의 복잡·다양한 규제로
인해 현장 수용성 저해

● 노동집약적 산업 탈피 등 체질개선 필요

-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경험 중심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하여 스마트화 등 효율성
개선 필요

●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요구

- 어업재해, 수산자원감소, 생태계 교란 등 피해 확대가 예상되며, 친환경연료 전환 등 환경규제
강화가 부담으로 작용 가능

3. 수산정책 추진 방향

① 행복한 어업인, 살고 싶은 어촌

- (어촌재생) 어촌마을(300개소)에 경제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안전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 (귀어·귀촌) 청년 어선 임대 지원, 양식장 임대제도 도입 등 어업 진입장벽 완화 및 청년유입 활성화
도모
- (소득 안전망) 수산공익형직불제의 지원 대상 및 단가 지속 확대

②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

- (어업 관리체계) TAC 확대 등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기존의 투입 중심의 규제는
개선 추진

- (어업 질서) 노후 지도선 대체 및 대형지도선 건조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어선 현대화 확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③ 첨단·친환경으로 도약하는 양식업

- (스마트양식) 스마트양식 확산의 거점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및 민간 보급 추진
- (친환경양식) '24년까지 인증부표 100% 전환, 청정어장 재생사업 확대, 굴껍데기 전처리 시설 지원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 (재해대응) 고수온 내성 종자 개발, 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고도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응 추진

④ 수산식품산업 육성으로 수산업 성장 견인

- (수출형 수산식품산업)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집적화·규모화 도모, 창업-수출까지 수산식품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유통구조 선진화) 저온·친환경 위판장 등 스마트·친환경 유통인프라 구축, 산지위판장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 등 新유통망 구축

지정토론

⑧

농특위 상설화를 위한 농특위법 개정 필요

김상경

(농특위 사무부국장)



농특위 상설화를 위한 농특위법 개정 필요

I. 검토 배경 및 필요성

① 농특위와 ‘농어업인 삶의질위원회’ 통합을 위한 개정법률안 발의

- 정부 위원회 정비방안('22.7월)에 따라 대통령소속 농특위와 농어업인 삶의질위원회 통합 결정,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 * 농어업인 삶의질위원회 폐지 및 농특위로 기능 이관('22.9.30, 정부발의)
 - 한시조직인 농특위(5년, ~'24.4월)가 상설조직인 농어업인 삶의질위원회('04~)를 통합함에 따라 삶의질 업무의 안정성 저하 우려
 - * 위원회 정비 관련 법률안 농해수위 검토보고서에도 존속기한 논의 필요성 언급
 - 농어촌지역의 지역소멸위험이 심각한 상황으로 주거·복지·의료·교육·문화 등 삶의질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조 필요성은 증대
 - * 지역소멸위험비율('21, 농특위) : (도시) 18.4%, (농촌) 89, (어촌) 77.2
- ⇒ ①농특위로 ‘농어업인 삶의질위원회’ 기능 이관, ②삶의질 관련 소관부처 관심·책임성 확보 및 실질적인 성과 창출 필요성 등을 감안, 농특위를 통한 부처간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필요

② 농어업·농어촌 이슈에 대한 장기적·연속적 활동 필요

-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업과 타 산업 간 격차*, 농어촌지역 저개발·난개발 문제 등으로 사회적 갈등 야기
 - *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 비중(%) : ('90) 8.4 → ('00) 4.3 → ('10) 2.4 → ('21) 2.0
- 농어업 홀대, 지역 침체 등 여건 개선을 위한 대내외 소통 및 협력 강화 등 농특위 역할에 대한 농어업계 요구 지속
 - * 현장 소통, 관계부처 협의 등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 화합을 도모하는 대통령소속 민관 협치기구로서 역할 필요(농축산연합회·한농연·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22.12월)

⇒ 농어업·농어촌 문제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장기간 누적되어온 것으로, 농어업의 산업적 특성 및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연속성 있게 대응할 필요

③ 유사 위원회와의 형평성 감안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장기적·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대통령소속 타 위원회는 존속기한 미설정

⇒ 장기적·종합적 대응이 요구되는 농어업·농어촌 이슈의 특성, 유사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필요

II. 농특위법 개정 방향(안)

위원회 정비 관련하여 기 발의되어 있는 농특위법 개정안의 미비점 보완 필요성 등을 감안, 농특위 존속기한 규정(농특위법 제13조) 삭제 추진

■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 발의 필요

- 기 정부발의 법안과 병행심사를 위해 의원발의로 조속히 추진 필요

〈대통령소속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비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근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조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3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조
존속기한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2024. 4. 24.	미설정	미설정	2027. 5. 31.	2027. 7. 1.
근거	-	-	-	-	법 제13조	-	-	운영규정 제14조	운영규정 제14조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consisting of 25 horizontal lines.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25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